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는데 유럽 관광이라니...

세월호 참사 여파 속에 전남지역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와 일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사무처 직원 3명과 전남도 및 19개 시·군 의회협력 담당 공무원 19명 등 22명은 서유럽 4개국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관계관 국외연수'를 위해 지난 21일 출국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16일)한 지 5일이나 지났고, 출발 당시까지 안전행정부의 해외여행 자체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도의회의 해명이다. 국무총리실과 안행부는 지난 21일 자치단체 등에 연가사용과 해외여행 자체 지침을 보냈다.

이들의 국외연수는 영국을 거쳐 프랑스, 독

22명 서유럽 연수 출국

보성군수 출마후보 4명은 위령제서 선거운동 빈축

일, 스위스 등 선진국 지방의회를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었지만 대부분 일정은 관광이었다. 예산은 1인당 480만원씩으로, 도와 시·군이 지원한 금액만 모두 1억원이 넘었다.

이들은 30일까지 8박10일 일정으로 연수 프로그램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안전행정부의 해외연수 제한 조치에 따라 25일 귀국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의 해외여행 자체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일정을 취소했으나 비행기편을 마련하지 못해 귀국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동료 공무원들이 열흘 넘게 비상근무를 펼치고 있는데도 해외연수를 강행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장흥 등 일부 시·군 공무원도 세월호 참사 이후 집단으로 해외연수를 떠난 것으로 드러나 전남도 감사관실이 조사중이다.

전남지역 일부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국민정서와 어긋난 선거운동도 비난을 받고 있다.

보성군수 출마후보자 4명은 지난 27일 불교연합회 주관으로 보성군 법교을 채동선 음악당

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에 지지자들과 함께 나타나 명함을 돌리면서 추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 후보는 의자에 앉아있는 참석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악수를 했고, 또 다른 후보는 아예 행사장 입구에서 참석자를 맞이하기도 했다. 본 행사를 앞두고 추모음악을 흘러나왔지만 선거운동 탓에 위령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한 참석자는 "요즘 같은 시국에 세월호 위령제까지 찾아와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제정신이냐"며 "표에 눈이 멀어 국민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대통령 대국민사과 언제·어떻게 주목

野 촉구속 與서도 필요성 제기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여론이 여야를 넘어 확산하면서 박 대통령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부가 이번 사고의 초동 대응과 수습 등 전 과정에서 난맥상을 드러낸 만큼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사태수습과 국정쇄신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에서 빚발치고 있는데다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으며, 여권에서도 새누리당 혁신연대의 재선그룹 간사인 김영우 의원이 28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아마 사과 표명을 하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치권은 29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사고 7주째인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난맥상과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강하게 질타했지만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부실대응을 인정한 총리의 27일 사의를 수용한 박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 자리에서만큼은 국정의 전면쇄신을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더 이상 시기를 늦추다가는 민심 이반의 확산을 제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사과는 간접적 방식이어서 논란 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별도의 기자회견이나 대국민담화라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통해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월호 침몰 방관 박정권 퇴진하라” 광주·전남 진보연대는 28일 오후 북구 중흥동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침몰 수수방관, 책임회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나명지기자 mjna@kwangju.co.kr

현수막·확성기 사용 양고 로고송 배제 검토

신중·조용한 선거운동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애도 분위기 속에 여야가 지방선거 일정을 조심히 재개하면서 일부 후보들도 선거운동을 속속 재개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후보들은 애도 분위기 속에 선거운동을 했다가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선거운동 방식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확성기, 로고송, 거리운동 등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6·4 지방선거는 차분한 가운데 선거전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부분의 후보들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중단됐던 선거운동을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재개했다. 이들은 전국적인 희생자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시끄러운 캠페인을 자제하고, 선거사무소에서 당원·대의원, 지인들을 만나는 등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이 재개되더라도 시끄러운 로고송과 유세차량 및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병완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차분하고 조용한 '4무(無)3소(小)' 선거를 치르겠

다"고 밝혔다. 현수막, 확성기, 스피커, 거리운동을 없애는 '4무(無)'와 선거사무소, 조직, 비용을 대폭 줄이는 '3소(小)' 혁신 선거운동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재선 도전에 나선 최영호 남구청장 등 일부 예비후보들도 이번 선거에는 로고송 사용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구청장 예비후보는 "몇몇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다 역풍을 맞는 상황이 벌어져 거리유세나 출근길 인사 등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사태 수습 추이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4분 해질 19시 16분 달돋이 06시 37분 달질 19시 20분

진도해상 '때때로 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내리는 곳 있었다.

광주	비	13/17℃
목포	비	13/17℃
여수	비	14/16℃
나주	비	13/18℃
완도	비	13/17℃
구례	비	14/18℃
강진	비	13/17℃
해남	비	13/17℃
장흥	비	13/17℃
순천	비	14/18℃
영광	비	13/18℃
진도	비	13/17℃
전주	비	12/19℃
군산	비	12/17℃
남원	비	12/17℃
옥산도	비	12/16℃

식중독지수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보통 보통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민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0(수)	5/1(목)	2(금)	3(토)	4(일)	5(월)
날씨						
최저/최고	12/20	10/25	10/27	12/24	11/25	11/24

교육청 수학여행 매뉴얼 안지켰다

유기홍 의원 밝혀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28일 교육부가 지난 2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알린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북을 제외한 16곳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는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반드시 '현장학습 공개방'을 개설, 운영토록 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각 학교는 이 공개방에 현장체험학습 전에 ▲사전답사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계약서 사본을, 체험학습 후에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조사 결과 등 총 5가지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공개방을 개설만 했을 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전남은 사전 답사·학운위 심의·계약서 사본 등 사전공개 항목은 공개하지 않고, 학생 1인당 경비·학생만족도 조사 결과 등 사후공개 항목만 공개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태안 해병대캠프 사건을 계기로 매뉴얼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키는 교육청은 거의 없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무원이 안전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 금 매매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38P → 9000만원 (시세/감정가 1억 5000만원)
 53P → 1억 3000만원 (시세/감정가 2억원)
 77P → 2억 3000만원 (시세/감정가 3억원)
 단, 2014년 4월 30일까지
 문의, 010-3605-5000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1:1 개인지도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분사 결정

(주)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